

제주시민교육의 기본 방향과 과제

· 강 봉 수 ·

목 차

- I. 서 론
- II. 제주시민교육의 개념 정의
- III. 세계시민 교육과 문화정체성의 문제
- IV. 제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현안 과제
- V. 맺음말

“지구촌 시대의 시민은 서욱(제주 : 펑자)의 시민, 한국의 시민이 되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시민, 세계의 시민이 되는 다차원적 수준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

-뮤레이 프린트(Murray Print)-

I. 서 론

이 글은 '제주시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그런데 '시민', '민주시민' 혹은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지만,¹⁾ 아무래도 '제주시민교육'이란 용어는 낯설다. 그도 그럴 것이 연구자가 아는 한 이 용어는 필자가 처음 쓰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일단 '제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는 '제주시민'과 '교육'의 합성어로, 혹은 '제주'와 '시민교육'의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전자로 볼 경우, '제주시민'은 제주도민, 북제주군민, 서귀포시민처럼 특정 행정구역의 구성원이라는 뜻이고, 제주시민교육은 제주시의 구성원인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하

*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1) 시민, '민주시민', '민주시민교육' 등의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해방이후의 일이다. 즉, 해방 후 미군정 하에 편성된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사회생활영역(공민·지리·역사 등 포함) 중에 민주시민의 자질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公民'이라는 과목을 설정하면서부터인데, 그 과목은 미국의 'Civics'이라는 교과와 같은 성질의 것이었다. 김용만, 「한국 사회과교육의 변천과 전망」, 『사회과교육』 제20호 (한국사회과교육회, 1987), 61~93쪽.

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시민' 혹은 '민주시민'과 같은 명칭에서 사용하는 시민이란 특정 행정구역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 '제주시민교육'은 후자의 경우, 즉 '제주'와 '시민교육'의 합성어이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이라 하더라도 '제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는 아무래도 어색하다. 과연 한 국가내의 특정지역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제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자 나름의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자 한다(Ⅱ장). 그런 다음, 제주시민성의 구성요소 간에 제기될법한 의문으로써, 세계시민성(교육)과 문화정체성(교육) 간의 갈등과 조화 가능성의 문제를 검토한다(Ⅲ). 다음,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의 궁극적 목적인 제주시민교육의 기본 방향과 현안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Ⅳ). 결론에서는 논의를 요약하면서 제주시민교육의 잠정적 모형을 제시해 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해 둔다(Ⅴ).

Ⅱ. 제주시민교육의 개념 정의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라고 하지만 사실 '시민'이라는 개념도 쉽게 정의하기 어려운 지극히 다의적이고 역사성을 가진 용어이다. '시민'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였음직한 시대는 아마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시기였을 것이다. 그때 '시민'이 뜻하는 바는 나라의 政事에 직접 참여하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특혜를 누리는 소수의 특권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시민공동체'를 자처한 로마공화국에서의 '시민'도 소수 귀족에 국한되는 의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 후 근 2,000년 동안은 '시민'이라는 용어와 '시민에 의한 통치방식'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아무래도 현대적 의미의 '시민'이 등장한 것은 근대 시민혁명 이후의 일일 것이다. 그 당시 혁명의 주체세력들은 세대를 이어 특권을 누리는 왕족, 귀족, 승려, 기사 등의 특수층의 지배력을 분쇄하고, 모든 계층, 인종, 종교, 교육, 직업 등과 관계없이 평등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참여권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점에서 시민혁명은 획기적인 민주변혁운동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서민 대중의 권익이 신장되고 평등한 법적 조치들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참정권 내지 투표권이 부여되는 계층은 제한되었다. 이처럼, 시민의 범위는 오랫동안 제한되었던 것이며 오늘날처럼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게 보편적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기까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된 투쟁에 의한 정치적 변혁이 필요했던 것이다.²⁾

오늘날 일반적으로 시민은 한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이른바 시민권을 갖는 구성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민의 법률적 지위를 규정하는 것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며,³⁾ 오늘날 시민의 지위와 역할 등 제반 특성, 즉 시민성의 의미에는 법률적, 정

2) 박용현, 『민주화 세계화와 교육과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05~120쪽 참조.

3) 예컨대, 우리나라는 혈통에 의해 시민권이 부여되고 있고, 미국은 출생지에 의해 법적 지위가 규정되고

치적 의미 이상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복지와 권리신장의 뜻이 담겨 있다.⁴⁾ 박용현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시민성의 일반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즉, 시민성이란,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으로서 性, 인종, 종교, 사상, 직업 등에 관계없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제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하고 모든 직위나 명예를 포함하는 사회적 혜택에도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조건과 기회를 향유하여 구성원 각자의 고유한 방법으로 공동사회의 원활한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⁵⁾

이러한 정의에 의할 때, 시민성은 시민의 지위에 대한 법률적 보장은 물론이고,⁶⁾ 시민들 스스로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민적 특성 내지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터득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적 특성을 함양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적 노력을 ‘시민교육’ 혹은 ‘민주시민교육’이라 하는 것이다. 요컨대, 일반적으로 오늘날 시민(성)은 한 나라의 법률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복지와 권리신장을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며, (민주)시민교육이란 그 국가 공동체의 원활한 영위를 위해서 그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권리와 의무를 포함해서 국가관 등 가치관, 규범, 자질특성을 함양하고자 이루어지는 교육적 노력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시민교육 혹은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제주도민들에게도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제주도민을 위한 시민교육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과 다를 것이 없다면 굳이 ‘제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종전까지는 시민의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주로 ‘국가’라는 지역적 단위로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지방정부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라는 지역적 단위를 넘어서 세계 공동체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는 방향의 노력이 일고 있다. 이를테면,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교육을 심도 있게 연구해온 린즈(James Lynch)는 시민성을 최소한 세 수준 내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는데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 세계공동체 등이 그것이다.⁷⁾ 첫째 수준의 지역공동체는 가족, 인종, 종교, 언어, 직장 등과 그 밖의 각종 사회·문화적 조직체 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개인은 이들 지역단위 내지 조직단위의 구성원이 되면서 그 공동체의 원활한 영위를 위해서 부여되는 책임, 의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둘째 수준의 국가공동

있다. 이외에 귀화에 의해 시민권을 획득할 수도 있다.

4) 시민성의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 중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시민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성의 법률적 규정과 그 제도화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전자의 주장의 예로는 B. S. Turner, *Citizenship and Capitalism* (London: Allen & Unwin, 1986), pp.107~133 참조. 후자의 주장의 예로는 D. Heater, *Citizenship: The Civic Ideal in World History, Politics and Education*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0), p.246 참조.

5) 박용현, 앞의 책, 118쪽.

6) 이를테면, 시민적 지위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국가들에서는 主權在民, 人間の 自決的, 自治的 능력에 대한 신념, 법치주의, 다원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더욱 구체적인 시민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 사생활의 자유에서부터 신앙, 언론, 집회, 결사, 거주, 직업, 재산소유와 처분, 계약 등의 자유와 투표권과 청원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7) James Lynch, *Education for Citizenship in a Multicultural Society* (London: Cassel, 1992), pp. 16~17.

체는 국가단위의 것으로 개인의 출생에 의해서 구성원이 결정되었으나 이제는 선택에 의해서도 구성원이 되는 융통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셋째 수준의 세계 공동체는 앞의 두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특징과 관계없이 누구나 구성원이 되면서 인류 공동의 이상과 관심사의 성취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제주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자 시도하는 것도 이러한 최근의 연구경향에 주목하는 것이다. 우선, 따지고 보면, 서구사회에서 시민성의 실제적 의미는 시민에 의한 자치적 통치양식의 발달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즉, 시민들의 시민의식은 그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의 자치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공동생활의 조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거주하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직접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민주화의 진전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현재 특별자치도로의 승격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은 그에 걸맞는 제주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자치능력을 가져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그러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교육의 과제인 것이다. 제주시민교육은 바로 이러한 교육적 과제와 관련하여 개념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주도민들의 시민성은 제주공동체에 관한 정체성과 자치능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의 민주시민이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려는 이른바 '세계시민'의식도 필요하다. 시민성의 실제적 의미가 지역의 자치체와 관련이 있고, 시민의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주로 '국가'라는 지역적 단위로 파악하여 온 점을 감안하면, 엄격히 말해 '세계시민' 혹은 '세계시민의식'이라는 개념을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⁸⁾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불가피하게 추진되는 세계적 삶의 조건을 인식하고 그 같은 삶의 조건을 수용하여 전 인류에게 재앙보다 축복을 주는 세계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질과 행위양식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이는 바로 세계 공동체의 건설 대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며, 앞으로 제주도민들이 상대할 사람들은 전혀 다른 문화와 의식을 소유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은 그들과 경쟁하고 공생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능력과 자질인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교육적 노력을 '세계시민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적 과제도 바로 제주시민교육 개념화의 한 축을 차지하는 것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상에서, 제주시민교육이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함양하고자 하는 '시민성'은 제주지역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자치능력,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요구되는 정체성과 민주시민의식, 나아가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행위양식을 포함하는 '다중적 정체성'(multiple identities) 혹은 '다중적 시민성'(multiple citizenships)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⁹⁾

8) Derek Heater, *Citizenship: The Civic Ideal in World History, Politics and Education* (London Longman, 1990), pp.229~234.

9) 뮤레이 프린트도 지구촌 시대의 시민은 서울의 시민, 한국의 시민이 되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시민, 세계의 시민이 되는 다차원적 수준의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향후 시민교육은 '다중적 시민성의 함양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urray Print,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Forum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제주시민교육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할 때, 그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민주시민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제주시민교육은 종전의 민주시민교육을 공간적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제주 지역공동체 수준으로 좁히거나 세계 공동체적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영역에 제주 지역적 수준과 세계 공동체적 수준의 교육적 과제들이 더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세계시민교육과 문화정체성의 문제

제주시민교육은 종전의 민주시민 교육적 과제 외에 제주지역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자치능력의 함양, 그리고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행위양식의 함양이라는 세 가지 교육적 과제를 포함한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되는 점은 각 차원의 공동체의식 혹은 시민의식 간에 갈등이나 마찰 없이 교육적 과제해결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으로 인해 우리의 문화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논쟁거리다. 따라서 우선 이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 다음, 각 차원의 시민의식 함양이 갈등 없이 접근 가능한 것인지를 돌아보기로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세계화라는 오늘날의 현상에 적응하고 나아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인류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노력이다. 따라서 세계시민의식 내지 세계 공동체의식의 형성은 세계시민교육의 가장 중심적 과제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는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 내지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세계화' 현상에 대한 담론들과 관련된다.

오늘날 '세계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가져올 부정적 폐해에 대한 논리와 주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그 공격의 초점은 세계화의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맞춰지고 있다.¹⁰⁾ 단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교육을 이윤

the Asia-Pacific Region (Seoul, Korea: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October 16~17, 2001), pp.14~15.

- 10) 예컨대, 한스 페터 마르틴과 하랄트 슈만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화란 단적으로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이라 보고 있다. 즉 "한마디로, '세계화'를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가 숨겨놓은 덫에 스스로 단단히 걸려들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고 있는 셈이다." 한스 페터 마르틴·하랄트 슈만 지음, 강수돌 옮김, 『세계화의 덫』 (서울: 영림카디널, 1997: 2000 초판 26쇄), 36쪽. 노암 촘스키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노암 촘스키, 강주현 역,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서울: 도서출판 모색, 1999) 참조. 한편, 이들의 이론적 관점을 토대로 한국의 세계화 정책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계획에 관해서 비판적인 입장들이 있다. 예컨대, 정대연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을 (1)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투기성 금융자본의 독재체제', (2) 자본의 무한 착취의 자유보장, (3) '노동대중의 삶'의 파괴 속에서 초국적 독점자본의 이윤을 개선, (4) 공공성의 파괴와 민주주의 후퇴, (5) 무차별적인 경제침략과 세계적 범위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극대화 등으로 파악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도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에 해당될 가능

창출의 영역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이 건전한 민주사회의 기반이라는 생각 대신에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사적으로 획득되는 상품으로 만들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교육관이다.¹¹⁾ 따라서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세계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교육의 연장이라기보다는 국경 없는 무한대의 경쟁질서에 맞설 수 있는 능력배양 교육, 기능인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교육에 불과하다. 또한 세계보편운리를 교육하고 세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이란 것도 그 본질은 한마디로 서구 자본 강대국의 사상과 가치와 규범에 순응토록하는 사상의 종속교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¹²⁾ 이러한 반세계화론 혹은 신자유주의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및 교육계에서도 일정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한편, 반세계화론의 연장선상에 직접 닿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자국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이 각 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의 연장선에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그것은 각 나라의 특수 가치 내지 민족주의 가치를 초월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자국의 전통문화의 보호와 애국심을 포함하는 자국 의식의 강화 등 민족주의 성향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개별 국가의 시민교육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자국의 문화정체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계시민교육을 할 수는 없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면 위의 반세계화론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답을 줄 수 있음직도 하다.

우선, 정체성에 관한 최근의 담론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최근 우리 지식계에서 주요한 하나의 담론 주제로 등장했던 바 있다.¹³⁾ 그것은 제주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¹⁴⁾ 우리가 아는 한 어떤 국가나 민족, 지역사회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정체성의 문

성을 내비치고 있다. 정대연,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 약탈성과 침략성」, 『제주국제자유도시 도민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1.10.20), 7~19쪽 참조.

- 11) 2001년 EI 총회를 앞두고 7월에 발간된 EI 기관지에 게재된 글을 발췌, 번역 게재한 「세계화시대의 교육: EI 3차 총회와 '모두를 위한 교육」, 『초등 우리교육』 (2001년 9월호) 참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주도하는 미국에서 교육의 실패를 매우 비판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는 책으로는 노암 촘스키, 강주헌 역,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 (서울: 도서출판 아침이슬, 2001) 참조.
- 12) 특히 우리 교육정책을 신자유주의와 관련시키면서 벌어졌던 일련의 논쟁적 글들은 『초등 우리교육』, 2001년 1~10월호에 게재된 연속기획 시리즈 「교육과 신자유주의 논쟁」을 참조할 것.
- 13) 대표적인 최근의 논저를 들면,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서울: 책세상, 1999); 사회와 철학연구회, 『세계화와 자아 정체성』 (서울: 이학사, 2001)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대규모의 담론장은 2000년 6월 27~28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개최한 한국학국제학술회의였다. 이 학술회의의 대 주제는 「새천년 한국인의 정체성」이었는데, 10분과로 나누어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그 분과주제를 보면 1분과: 他者와의 만남: 歷史的 觀點, 2분과: 韓國人の 正體性과 南北 이슈, 3분과: 公演藝術과 미디어에 나타난 韓國人の 正體性, 4분과: 韓國 宗教의 正體性 摸索, 5분과: 儒敎的 正體性과 글로벌 이슈, 6분과: 韓民族 分散과 正體性의 再構成, 7분과: 文學, 言語, 思想으로 본 正體性의 形成, 8분과: 現代 韓國人の 性 正體性 變化, 9분과: 韓國人の 正體性에 대한 世界化의 挑戰, 10분과: 地球化 時代의 새로운 韓民族共同體의 意味 등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새천년 한국인의 정체성』 제1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2000. 6) 참조.

제가 제기될 때는 그만큼 해당 주체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이다. 정체성을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 “특정 주체를 계속 그 주체로 남게 하는 특성”이고 “나를 계속 나이게끔 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¹⁵⁾ 그런데 이런 특성이 문제되는 것은 바로 그런 주체(나)가 그것과 다른 것(타자)에 의해 어떤 측면에서든 그 지속적 존립이 의문시되는 경우이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정체성 담론은 등장하게 되거나, 그 정체성 담론이란, “〈나와 다른 남〉 또는 〈달라진 나〉를 한편으로 하고, 〈여전히 살아가야 할 나〉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이 양자의 관계에서 그 〈나〉에게 조성된 위기에 대응하여 〈나를 계속 나로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을 〈나의 정신〉안에서 특정 형태로 재창출하고자 하는 일종의 정신 태도 담론”¹⁶⁾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논의 구도에서 볼 때, 〈나〉는 한국, 좁게는 제주이고, 〈타자〉는 말할 것도 없이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문제삼는 지점은 〈나=한국, 제주〉와 〈타자=세계〉의 관계에서 〈나=한국, 제주〉에게 조성된 위기에 대응하여 〈나=한국, 제주〉의 정신을 특정한 형태로 재창출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가 그동안 대처해온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은 다음의 둘 중의 하나다.

첫째는, 한국문화(제주문화) 혹은 한국정신(제주정신)의 순수성을 찾아내어 그것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보수적이고 폐쇄적 입장이다. 외래에서 유래한 모든 것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한국적인 것’을 찾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입장의 사람들은 전통과 정통을 중시한다. 가까이서 전통의 입장에서 서양적인 것(미국적인 것)을 배제하자는 것에서부터 멀리는 정통의 입장에서 중국적인 것(유교, 불교, 도교)까지도 배제시켜 원조 한국철학 내지 정신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는 것이 사실이다.¹⁷⁾ 이러한 입장은 한마디로 모든 타자를 거부하는 극단적 자민족 중심주의 자들이고 원조 콤플렉스에 메인 자들이다.

원조 콤플렉스에 메인 정체성 담론은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내면적 열등감에서나 운위될만한 것으로, 강대국에서는 문제조차 제기되지 않는다.¹⁸⁾ 오히려 그들에게서 제기되어 왔던 것은 근대와 이성, 계몽과 문명, 그리고 보편의 이름으로 가장해왔던 문화제국주의적 자민족 중심주

- 14) 먼저 의식조사를 통하여 제주의 정체성과 제주정신을 찾으려했던 논저로 김항원, 「제주도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0):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총국·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정립」(1996) 등이 있다. 다음으로 문화지리학적 관점에서 제주정신을 탐색하여 그것의 본질을 “海民精神”으로 제시한 송성대의 「濟州人の 海民精神」(제주: 제주문화, 1996)이 있다. 아마 이 책은 제주정체성 문제를 다시 쟁점적 담론의 주제로 등장시킨 계기가 된 것 같다. 송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조성윤, 「제주인의 문화정체성」, 신형철 외, 「제주사회론 2」(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등이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담론장으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최한 “제주문화의 정체성 찾기” 세미나와, 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연구센터가 주최했던 세미나가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21세기 제주문화예술의 새로운 방향 찾기」, 세미나 자료집(2001.10): 제주문화예술연구센터,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본 제주도의 미래」, 세미나 자료집(2001.12) 참조.
- 15) 홍윤기, 「지구화의 조건 안에서 본 문화 정체성과 주체성」, 사회와 철학연구회, 위의 책, 62쪽.
- 16) 홍윤기, 위의 글, 같은쪽.
- 17)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제주정신을 찾는 이가 있다면, 그는 외래적인 것에 한국적인 것까지 포함시켜 배제시키고 원조 제주정신을 발견하려 할 것이다.
- 18)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지음, 김명섭 옮김, 「거대한 체스판 -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서울: 삼인, 2000), 131쪽.

의였다. 약소국의 자민족중심주의가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이라면, 강대국의 자민족중심주의는 문화보편주의의 횡포이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또한 지난 세기 동안 이러한 패권적 문화에 휘둘려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패권적 문화의 공부를 떠나서 한국사회(혹은 제주사회)의 생활문화는 한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잡종의 상태가 된 지 오래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에 이러한 양상은 더욱 커지면 커졌지 순수성을 찾아 그것으로 재무장하기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둘째는, 순수한 한국적인 것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타자>와 <나>의 관계를 적절히 조정하여 <나=한국, 제주>의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창출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최근에 이러한 관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논자로는 김여수, 탁석산, 홍윤기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제국주의의 거부, 보편주의의 해체와 상대주의의 극복을 주장하는 점에서 이들은 공통분모를 이루지만,¹⁹⁾ 그 전략적 방법이라는 각도에서 입장을 달리한다.

먼저, 김여수는 일찍이 정체성 추구를 위한 작업을 '문화융합의 과제'라고 개념화한 바 있다.²⁰⁾ 즉 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 물음은 나에 대한 현상적 기술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미래지향적이고 규범적인 질문임을 전제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한 개인의 역사에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조건들과 그가 설정하는 규범적 기획에 내재하는 목표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만 주어질 수 있는 성찰적 물음"²¹⁾이고, 그것이 곧 정체성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집단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체성 구성의 작업, 즉 문화융합의 과제란, 자연이나 역사에 의하여 규정된 원초적이고 과거지향적인 토대를 넘어 "한 집단의 생활세계에서 생동적으로 작용하는 관념과 가치, 믿음과 태도, 관습과 행동양식, 제도와 규칙들을 현재와 미래의 삶의 조건에 미루어 새롭게 조명하고, 수정하고, 확장함으로써 하나의 정합적이고 응집력있고 총체적인 집합을 이루어나가는 작업"²²⁾을 말한다.

다음으로, 탁석산은 정체성 구성의 전략으로 '민족적 양식에의 세계적 속성'론을 주장하고 있다.²³⁾ 즉 그는 세계화 시대에 정체성 구성의 전략으로는 "한국적인 것을 찾아내어 미국적인 것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미국적인 것을 한국적인 것을 통해 표현하든지 해야 한다. 아니면 한국적인 것과 미국적인 것의 공통 속성을 찾아내어 구현하면"²⁴⁾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세계적인 것의 속성을 한국적인 양식에 담아내는 전략의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인다."²⁵⁾고 주장하고 있다.

19) 그러나 문화제국주의의 거부, 보편주의의 해체와 상대주의의 극복을 주장하는 이들의 관점이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점은 여기서 논의로 한다. 특히 탁석산과 김여수의 논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홍윤기, 앞의 논문 참조.

20) 김여수, 「문화주체성의 이념과 문화 상대주의의 문제」, 『언어와 문화』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7) 참조. 여기서는 김여수, 「정체성: 지구화와 파편화 사이에서」, 『새 천년 한국인의 정체성』, 제1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6), 9~17쪽 참조.

21) 김여수, 「정체성: 지구화와 파편화 사이에서」, 위 논문, 12쪽.

22) 김여수, 같은 논문, 13쪽.

23)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서울: 책세상, 1999) 참조.

24) 탁석산, 같은 책, 75쪽.

왜냐하면 정체성이란, '우리'라고 한정되어 불리는 집단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특수한 개성으로, 현재성(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대중성(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그리고 주체성(우리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갖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²⁵⁾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홍윤기는 '문화혼합' 시대의 '공주체적인 혼성 자아'(co-subjective hybrid ego)론을 주장하고 있다.²⁷⁾ 그는 "한국인의 생활과정은 끊임없이 여러 문화종들을 뒤섞어(즉, 문화혼합) 각자 스스로를 자기 요량대로 알아서 '자기 살기에 적당한 나'를 만들어 가는 과정"²⁸⁾이었고, 따라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내면에는 문화적으로 철저하게 잡종 교배된 각종 '혼성 자아'들이 들끓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런 조건 아래에서 추구되는 정체성이나 주체성은 그 어떤 순증성을 추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할 수 없다. 오히려 강요된 이질화의 압력 아래에서도 자기 삶을 살아갈 생활권과 생활 영역, 그리고 생활방식을 선별하여 자아를 구성할 토대를 구축하고 선별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관건"²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의 문화혼합(세계화 혹은 지구화)의 시대에 정체성을 구성하는 전략은³⁰⁾ 우선, "자아 그 자체가 끊임없이 다른 자아로부터 자신의 생활권이 위협받을 수도, 보장받을 수도 있는 생활 과정 속에 살고 있다는 것부터 자각해야" 하는 바, "이런 상태에서 생존해야 할 '나'는 우선 다른 '나'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또 그로부터 자신의 생활권을 보장받는 공생의 모델부터 습득해야" 한다. 그 다음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스스로의 인생을 전개할 생활 영역, 그리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엮어 갈 자신의 생활양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 여기서는 "모름지기 어떤 강력한 자아도 세계 전체를 혼자 살 수 없는 것"이기에 "자신의 자아는 그 안에 타자와 공생할 수 있는 정신의 여백을 항상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존립하는 자아, 즉 끊임없이 타자로부터 자신의 생활권을 보장받으면서, 그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생활권에서 자신이 성숙할 수 있다는 그런 자아의 태도를 홍윤기는 '공주체적인 혼성 자아'의 태도라 하고 있다.

이상에서 정체성 담론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했거니와, 우선 첫 번째의 '순수성' 추구를 통한 정체성 담론은 강대국의 문화제국주의적 태도와 함께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보편과 특수, 우월과 열등, 문명과 야만, 적과 동지 등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편가르는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관점이라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주장했듯, 이미 문화잡종 혹은 문화혼성의 한국사회 현실에서 외국에서 유래한 것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순수하게 한국적인 것을 찾아내는 작업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체성을 추구하는 작업은 일단 두 번째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른바 '한국적인 것'(혹은 '제주적인 것')을 찾아내는 작업이 불필요하거나 전적으로

25) 탁석산, 같은 책, 71쪽.

26) 탁석산, 같은 책, 81~117쪽 참조.

27) 홍윤기, 앞의 논문 참조.

28) 홍윤기, 같은 논문, 69쪽.

29) 홍윤기, 같은 논문, 71쪽.

30) 홍윤기, 같은 논문, 72~73쪽.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적인 것의 '순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국(제주)의 자연이나 역사에 의하여 규정되어온 '문화문법'(cultural grammar)을 찾아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³¹⁾ 우리는 그동안 이 작업에 소홀히 해 왔던 것이다. 아니 너무나도 강대한 패권적 문화침투에 노출되어왔기 때문에 그럴 여가가 없었다. 패권적 문화침투가 가져온 잡종의 문화이기에 여기에는 문화구성원들의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주체성과 자아의 상실은 곧 정체성의 상실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 학계 일각에서 정체성 담론이 주요 쟁론으로 떠오른 것도 이러한 측면에 대한 강한 반성인 것이다.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새로운 <타자>는 <나=한국, 제주>의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정체성의 재구성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타자>와 <나>의 관계를 적절히 조정하여 <나=한국, 제주>의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창출해야 한다. 정체성 창출의 방법으로 김여수의 '문화종합'은 앞으로 우리가 도달해야할 목표를 적시해 주고는 있지만, 현재에도 끊임없이 들끓고 있는 문화종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별작업을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이점에서 "강요된 이질화의 압력 아래에서도 자기 삶을 살아갈 생활권과 생활 영역, 그리고 생활방식을 선별하여 자아를 구성할 토대를 구축하고 선별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홍윤기의 주장은 주목된다. 말하자면 홍윤기가 정체성 재구성 작업의 출발점을 적시해 주고 있다면, 김여수는 그 목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교육학적으로 읽으면, 홍윤기는 교육의 출발과 과정을, 김여수는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적시해 주는 셈이다.

문화정체성 혹은 정체성 재구성 작업을 이상에서처럼 읽을 수 있다면, 앞서 제기했던 세계시민교육과 정체성의 문제는 결코 모순되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정체성의 재구성 작업이나 세계시민교육은 공히 '공주체적 혼성 자아'의 태도를 함양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31) 김형효(1993:11-157)는 소쉬르(F. de Saussure)의 언어기호학을 빌어 문화해독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즉, 소쉬르는 사회제도로서의 언어(*la langue*)와 개인이 개성에 따라 사용하는 말(*la parole*)을 구분하는데, 여기서 말은 시대변화와 개성에 예민하지만(通時性), 언어는 역사와 사회변화에도 쉽사리 변치 않은 共時的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개인이 자기 개성에 알맞게 쓰는 말도 사회적 제도나 체계 또는 문법으로서의 언어의 주어진 체계 내부에서의 놀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문화일반을 해독하는 방법으로 원용할 때, 말은 특정시대에 유행한 주류문화이고, 언어는 주류문화를 구조화시키는 문화문법에 해당한다. 여기서 전자를 결합체적 사슬(*syntagmatic chain*)이라 부르고, 후자를 계열체적 집합(*paradigmatic set*)이라 부르고 있다. 따라서 문화의 본질은 항상 계열체적 집합과 결합체적 사슬이 서로 얽혀서 존재하는 잡종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그는 문화문법을 낳게 하는 조건적(*conditioning*) 요소로 ① 자연적, 지리적 특성, ② 언어적인 특성, ③ 역사적 경험의 특성, ④ 의, 식, 주의 특성, ⑤ 친족구조의 특성, ⑥ 종교, 신앙의 특성, ⑦ 인구학적 특성 등을 들고 있다. 물론 이들 요소들은 결정적(*determinate*)이라기보다는 조건적 요소들이기에 문화문법이 전혀 변화가 없는 선형적 구조물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문법은 한 사회의 역사를 통하여 다듬어지는 역사의 산물이지만, 고도의 추상적 구성물(*abstract construction*)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변동, 혁신, 단절 등의 충격을 견뎌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역사적 변화와 위기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는 등 사회변동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외래문화가 들어와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성적 의미(즉, 외래문화의 주체적 수용)가 더해질 때 그것은 우리 문화로 化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문화의 창조도 여기서 가능하게 된다. 말하자면 우리 문화의 생리나 곁에 맞게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할 때 비로소 새로운 문화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때 이른바 '우리 것의 세계화'라는 말도 가능할 것이다.

홍윤기가 적시했듯, '공주체적 혼성 자아'는 타자와 공생할 수 있는 정신의 여백, 즉 관용의 정신을 내장하는 자아이다. 관용의 정신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될 핵심적 자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관용의 정신이란 어떠한 인종적 편견이나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의 모든 인종과 민족을 같은 인간으로 존중하는 정신이며, 인간의 다양성과 유사성, 인간 각자의 개성과 차이, 그리고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독자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용의 정신을 함장하는 자아들(민주시민, 세계시민)은 그들의 소속하는 공동체들의 안녕과 복지를 존중하고 그 공동선을 위하여 다른 시민들과 협동해 나간다. 홍윤기가 적시했듯, 이러한 자아들은 "꿈임없이 타자로부터 자신의 생활권을 보장받으면서, 그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생활권에서 자신이 성숙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개인은 누구나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인 동시에 이웃, 지역사회, 국가, 세계 등의 확대된 의미의 구성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구성원의 공동목표로 지향하는 공동선도 가정의 행복, 조직의 안녕, 지역사회의 복지, 나라의 융성, 세계 전 인류의 복리 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과 같은 기초적인 공동체의식은 학교, 이웃, 직장, 지역사회, 국가, 세계 등 차원의 공동체의식의 기초가 된다. 자기 거주지역이나 고향, 그리고 자기 출신학교의 운동선수를 열렬히 응원한다고 해서 그 상위 차원의 공동체의식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각 나라 애국심이 그 상위공동체인 세계 공동체의식 내지 인류애와 박애정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족애 없이 애교심, 애향심, 애국심을 기대할 수 없고 인류애, 박애정신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사실, 과거에는 지나친 민족주의의식이나 국가지상주의의식의 형성으로 민족과 국가 간에 갈등과 대립과 전쟁을 유발하게 된 사례들이 많았다. 그러나 세계화와 정보화 현상이 촉진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은 폐쇄적이고 쇠국주의적 민족주의나 국가지상주의는 오히려 고립되고 낙후되면 중국에 가서는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민교육도 확대된 의미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다중적 정체성의 확립'과 아울러 자기 소속되는 공동체의 공동선의 달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자질, 즉 '다중적 시민성'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IV. 제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현안 과제

앞으로 제주시민교육은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 세계공동체 등의 3차원적 시민교육을 체계화하고 그간의 관계 내용에 조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하여 제주시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표로 예시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제주의 교육현실에서 지역공동체 수준의 시민교육은 물론 기존 민주시민교육도 체계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 시대에 걸 맞는 시민교육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있기에 이러한 제주시민교육의 방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3차원적 시민교육의 방향은 반드시 제주시민교육만의 과제라고 볼 수 없다.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를 같이 사는 세계의 모든 지역공동체가 공히 안고 있는 교육적 과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 바람직한 제주시민교육의 방향

세계 속의 한국인이고 제주인임을 자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역공동체의 건설·유지·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계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인류공동선의 달성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인간의 양성

△

제주지역공동체 차원	한민족공동체 차원	세계공동체 차원
제주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운데 제주의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고 지역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제주인의 양성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운데,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고 한민족공동체의 건설과 유지·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한국인의 양성	세계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하여 오늘날의 세계화·정보화 현상에 적응하고 인류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세계인의 양성

그러나 모든 지역공동체가 시민교육의 기본 방향에 관해서는 뜻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교육과제의 선정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지역공동체마다 처해있는 사정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각각의 지역공동체들은 나름대로의 발전적 위상을 모색하고 실천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전략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교육적 기획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제주도는 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의 건설 목표에 걸맞는 시민교육적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주시민교육의 핵심과제를 필자는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 제주문화정체교육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우선, 한민족공동체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은 지금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앞으로도 학교 및 평생교육의 장에서 계속 수행될 것이기에, 제주시민교육의 핵심과제로는 제외한다.

둘째, 제주지역공동체 차원의 시민교육은 제주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자치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며, 한민족공동체 차원, 세계 공동체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 능력의 함양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일천하긴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여왔고, 국가적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 교육도 이루어져 왔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앞으로 특별자치도로의 승격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교육과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대열에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모색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염두에 둘 때, 더 시급한 교육과제는 제주문화정체의 확립과 도민들의 정체성 함양에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제주지역공동체 차원의 시급한 시민교육적 과제를 제주문화정체교육으로 삼고자 한다. 특히, 제주문화정체교육은 세계화와 국제자유도시 시대에 외래문화의 창조적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과제되어야 한다.

'창조적 수용'이란 단순히 외래의 가치나 문화를 단순히 '피동적으로 받아들여짐'과는 거리가 멀다. 이를 단순히 '피동적으로 받아들여짐'에만 국한될 경우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고 말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서 먼저 '수용' 혹은 '받아들임'과 '받아들여짐'사이에는 개념적으로 큰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내가 손님을 마중하는 행위는 그를 받아들이는 일과 같다. 손님을 잘 받아들이는 행위는 주인 스스로의 생각에 어떤 능동적 '예비규정'을 전제로 해서 가능하다. 나는 손님을 잘 청소된 안방이나 응접실 또는 여름철에 정원에서 맞이하지 아무런 예비규정이 없이 들판이나 쓸쓸한 곳에서 수용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예비규정을 준비하지 않고 불시에 손님의 내방을 받으면 그것은 엄밀한 뜻에서 손님을 받아들임(receiving)이 아니고 손님에 의하여 내방 당함(undergoing)이 된다. 이처럼 외래문화를 수용하든 또는 손님을 맞이하든 모든 수용은 결코 피동이 아니고 주체적 능동성에 입각한 예비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창조적 수용'이라 했을 때, '창조성'의 논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나무 접붙이기'에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예컨대, 우리가 보다 품질이 좋은 단감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돌감나무와 단감나무를 접목시킨다고 하자. 이때 대목은 어떤 나무이어야 하고 가지는 또 어떤 것이어야 하겠는가? 당연히 대목은 돌감나무이어야 하고 가지는 단감나무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얻게 되는 감은 어떤 것인가? 물론 외형이나 맛이 모두 단감이다. 그러나 사실 얻어진 단감의 맛은 이전의 맛에 알파가 더해진 품질이 향상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자세이고 문화 창조의 논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만약 단감을 얻으려 돌감나무와 접붙이지 말고 단순히 단감나무만 들여왔다고 해 보자. 이때 단감을 얻기는커녕 생리에 맞지 않는 단감나무는 말라죽든지 단감이 열린다 하더라도 품질은 더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를 외래문화의 수용이라는 각도에서 본다면 외래의 표피문화만 들려오고 내용과 본질이 빠져버린 꼴이 되는 것이다. 또 단감나무를 대목으로 하고 돌감나무를 가지로 한다고 하면 어떨까? 이 때도 마찬가지로 얻으려는 돌감은 여리기도 전에 나무가 말라죽든지 더 형편없는 돌감이 열려 먹을 수조차 없을 것이다. 우리의 예전의 외래문화 수용이 혹시 이런 형국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특히 해방 후 우리는 전래의 대목은 무시한 채 가지만을 들여오든지 아니면 가지와 대목을 뒤 바뀐 것은 아닌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제자유도시 건설로 제주문화도 우리나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은 '생리'라는 용어이다. 우리(제주)의 '생리'나 '결'에 맞지 않는 외래문화를 단순히 받아들일 경우 우리(제주)는 다가오는 세계화와 국제자유도시 속에서 다시 한 번 허우적대는 무주체성의 민족(제주인)이 되고 말 것이 뻔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대

목에 해당하는 '우리 것'(제주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성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세계화의 흐름이 맞닿을 때 비로소 창조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때 '우리 것'(제주 것)의 국제화·세계화도 모색된다. 따라서 제주문화정책교육은 이러한 제주의 '생리'에 관한 반성적 성찰이고 국제자유도시 시대 새로운 문화 창조를 대비하는 교육이다.

셋째, 세계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시민교육은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행위양식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세계시민교육'이다. 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걸맞는 세계시민의식의 함양교육은 중요한 교육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엄격하게 말한다면,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한 '세계시민'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세계시민교육'도 있을 수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개념이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시민과 같은 세계시민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세계시민' 사상 혹은 의식은 있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이나 사상이 가능한 저변에는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심리적 경계에 의한 세계국가가 존재하고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를테면 고대 로마제국³²⁾이나 중국천하(中國天下)³³⁾ 같은 것이 그것으로, 이들 국가의 시민들은 자신들을 한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세계국가, 세계의 시민으로 자인했던 것이다. 저 고대 그리이스의 소크라테스(Socrates)나 디오게네스(Diogenes) 같은 사람도 어느 나라 출신이냐고 질문 받으면 언제나 "나는 세계시민이다"라고 대답했었다고 한다.³⁴⁾

현대적인 의미의 '세계시민'과 '세계시민교육'이란 용어가 사용되었음직한 때는 세계 1차 대전(1914~1918), 2차 대전(1939~1945)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양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전쟁으로 인한 가공할 파괴와 불행을 체험하게 되고 평화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인류복지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등장한 국제기구가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 1919)이고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 1945)이었던 것이다. 먼저 국제연맹의 결성 취지에 따라 교육의 영역에서도 국제 이해교육과 평화교육을 비롯한 이른바 '세계시민교육'(Education for World Citizenship)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³⁵⁾

32) 토인비에 따르면, "기원 후 2세기에 이르러, 그리스인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경멸했던 세계국가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5세기에 로마제국이 멸망할 정도까지 쇠퇴했을 때, 시민들은 로마제국에 새로운 이름을 붙임으로써 애착심을 표현했다. 즉 그들의 세계국가를 '로마니아'(Romania)라고 부름으로써 시민들은 그들이 모든 로마인들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고, 로마 세계국가가 그들의 공통된 조국이라는 것을 자부하였다."고 한다. Arnold J. Toynbee, *Change and Habit: The Challenge of Our Tim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120. 조영식 편저, 『세계시민론』 (경희대학교 출판부, 1995), 56쪽에서 재인용.

33) 중국의 천하사상에 관해서는 정인재, 「중국의 천하사상: 유상의 세계화를 중심으로」: 최진덕, 「平天下, 유학적 세계화의 궁극적 이념」: 정재현, 「중국적 세계(天下)질서의 성격」, 성염 외, 『세계화의 철학적 기초』(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397~493쪽 참조.

34) 홀로이드 맬슨, 「세계의 시민들: 도덕사상의 진화」, 조영식 편저, 위의 책, 54~67쪽. 고대 그리스-로마의 세계시민 사상에 관해서는 성염, 「고대 그리스-로마 세계의 세계시민 사상 - 세계화 운동의 그리스적 발원」, 성염 외, 위의 책, 11~24쪽 참조.

35) William G. Carr, *Education for World-Citizenship* (California: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28), p.6.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시민 내지 국가 구성원을 규정하듯이 법률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며 세계국가 내지 국가연방과 같은 세계통치형태의 구성을 바라거나 제안하고자 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로서 의도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 내지 생각과 의지의 습관을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략) 세계의 모든 시민은 오늘날과 같이 불가피하게 추진되는 세계적 삶의 조건을 인식하고 그 같은 삶의 조건을 수용하여 전 인류에게 재앙보다 축복을 주는 세계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질과 행위양식을 학습해 가야 하는 것이다.”³⁶⁾

인용은 1939년 영국에서 결성된 세계시민교육협의회(the Council for Education in World Citizenship: CEWC)가 세계시민교육의 성격에 대해 규정하였던 내용이다. 여기서 보듯이, 한 국가의 시민처럼 세계국가가 전제되지 않은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져 가는 세계적 삶의 조건과 관련하여 전 인류에게 국제문제를 이해시키고, 평화와 복지의 세계 공동체 건설에 요구되는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시민 교육의 대상은 세계시민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요구에 근거한 심리적 차원의 세계시민일 뿐이다. 이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이란 정확히 말하면, 자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국제이해교육 내지 평화교육 등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사정으로 국제연합이 결성된 이후 예하에 조직된 유네스코(1946)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 대신에 차라리 ‘국제이해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이라 명칭하였고, 이후에도 ‘세계 사회에서의 삶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Living in World Community), ‘국제이해 및 협력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국제이해, 협력 및 평화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국제이해, 협력 및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및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 Education relat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이라는 긴 명칭을 거쳐, 1995년 이후에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국제이해와 관용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Democracy,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Tolerance)으로 불리고 있다.³⁷⁾

이러한 용어사용의 변천사에서 보듯이, 세계시민교육은 국제이해교육 및 평화교육에서 출발하여 인권과 민주적 보편가치를 다루는 교육, 국제협력과 관용을 위한 교육 등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는 국제이해교육과 평화교육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한다면, 세계 공동체적 차원의 제주시민 교육적 과제도 국제이해교육과 평화교육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 점은 제주가 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것에서도 부합하는 설정이라 여긴다.

36) Derek Heater, *Peace through Education: the Contribution of the Council for Education in World Citizenship* (London: the Falmer Press, 1981), p.19.

37) 정두용·신은숙·정득진 편저,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서울: 정민사, 2000), 15~16쪽. 국제이해 교육 혹은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용어의 다양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고찰은 권오정, 『국제화시대의 인간형성』 (서울: 배영사, 1986, 1996중판), 7~13쪽 참조.

특히, 여기서 평화교육을 독립된 과제로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은 평화교육에 대한 유네스코 적 접근의 한계와도 관련된다. 유네스코의 접근은 아무래도 평화교육보다는 상대적으로 국제이해교육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이라 하겠다. 국제이해를 통한 평화교육은 보편적인 평화교육의 내용을 강조하고 국제간 갈등의 문제에 더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평화교육의 과제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특수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의 문제가 단순히 전쟁의 부재만이 아니라 특정사회의 폭력화된 구조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인 의미로³⁸⁾ 받아들인다면, 유네스코와는 다른 측면에서 평화교육에 접근하는 비판적 평화교육론의 관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³⁹⁾ 제주시민교육의 과제설정은 이러한 의미의 평화교육까지 포함해야 한다. 제주가 추진하는 평화 섬의 미래상에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개념이 함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V. 맺 음 말

제주시민교육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함양하고자 하는 '시민성'은 제주지역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자치능력,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요구되는 정체성과 민주시민의식, 나아가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행위양식을 포함하는 '다중적 정체성' 혹은 '다중적 시민성'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은 제주지역 공동체, 한민족공동체, 세계 공동체 등의 3차원적 시민교육을 체계화하고 그간의 관계 내용에 조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3차원적 시민교육의 방향은 반드시 제주시민교육만의 과제라고 볼 수 없다.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를 같이 사는 세계의 모든 지역공동체가 공히 안고 있는 교육적 과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지역공동체가 시민교육의 기본 방향에 관해서는 뜻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교육과제의 선정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각각의 지역공동체들은 나름대로의 발전적 위상을 모색하고 실천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전략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교육적 기획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의 건설 목표에 걸맞는 시민교육적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제주시민교육의 핵심과제를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 제주문화정체 교육으로 선정한다. 이러한 핵심과제들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연구과제이다. 나아가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부터라도 학교 및 평생교육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잠정적인 <제주시민교육 모형>을 제시해 두면 <표 2>와 같다.

38) 요한 갈통 지음, 강종일 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참조.

39) 강순원, 『평화·인권·교육』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61~93 참조.

〈표 2〉 제주시민교육 모형

세계 속의 자랑스런 제주인 양성



세계 속의 제주인이고 한국인임을 자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역공동체의 건설·유지·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류공동선의 달성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제주인

1. 인권과 평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세계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인류애를 실천하는 제주인
2. 세계 속의 제주인이고 한국인임을 자각하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하며 새로운 문화창조에 이바지하는 제주인
3.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인류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제주인



인권과 평화교육	제주문화정체성교육	국제이해 및 다문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과 인류의 보편가치 ·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 성차별의 문제 · 인종차별의 문제 · 환경과 미래세대의 문제 · 전쟁과 평화의 문제 · 남북한 문제와 통일 · 한국 민주화운동과 인권 · 제주4·3과 평화의 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적·지리적 특성 · 언어적 특성 · 역사적 경험의 특성 · 의·식·주의 특성 · 친족구조의 특성 · 종교·신앙의 특성 · 인구학적 특성 · 정치·경제적 특성 · 사회·문화·교육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구사 능력 ·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상징체계: 법, 행동양식, 태도 등 · 고도정보망(인터넷 등)의 사용 능력 · 국제생활에티켓 · 다문화의 이해 ·異문화의 체험 · 국제문제의 이해



학교교육을 통한 접근	평생교육을 통한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을 통한 접근: 독립교과, 도덕과, 국어과, 사회과, 외국어과 등 ·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한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을 통한 접근 · 평생교육체제를 통한 접근: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접근

제주시민교육의 이론적 실천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특정한 어느 한 주체가 모두 맡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점에서 우선 제주도, 제주도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단체, 제주도내 대학 및 관련 연구소, 시민단체 등이 같이 하는 가치 '제주시민교육포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를테면, 제주도는 행·재정적 지원을 맡고, 대학 및 관련 연구소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및 시민단체들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역할분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참 고 문 헌

- 강순원, 『평화·인권·교육』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0).
- 고성준·강봉수,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제주도연구』 제21집 (사단법인 제주학회, 2002).
- 김명섭 옮김, 『거대한 체스판 -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 (서울: 삼인, 2000).
- 김용만, 「한국 사회과교육의 변천과 전망」, 『사회과교육』 제20호 (한국사회과교육회, 1987).
- 김항원, 「제주도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0).
- 노암 촘스키, 강주헌 역,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서울: 도서출판 모색, 1999).
- 노암 촘스키, 강주헌 역,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 (서울: 도서출판 아침이슬, 2001).
- 박용현, 『민주화 세계화와 교육과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사회와 철학연구회, 『세계화와 자아 정체성』 (서울: 이학사, 2001).
- 성염 외, 『세계화의 철학적 기초』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 송성대, 『濟州人の 海民精神』 (제주: 제주문화, 1996).
- 요한 갈통 지음, 강종일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 정대연,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 약탈성과 침략성」, 『제주국제자유도시 도민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1.10.20).
- 정두용·신은숙·정득진 편저,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서울: 정민사, 2000).
- 제주문화예술연구센터,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본 제주도의 미래」 세미나 자료 (2001.12).
- 제주문화예술재단, 「21세기 제주문화예술의 새로운 방향 찾기」 세미나 자료집 (2001.10).
- 조성운, 「제주인의 문화정체성」,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2』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8).
- 조영식 편저, 『세계시민론』 (경희대학교 출판부, 1995).
-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서울: 책세상, 1999).
- 한국방송공사제주방송총국·제주대학교동아시아연구소,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정립』 (199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새천년 한국인의 정체성』 제1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2000. 6).
- 한스 페터 마르틴·하랄트 슈만 지음, 강수돌 옮김, 『세계화의 뒷』 (서울: 영림카디널, 2000).
- B. S. Turner, Citizenship and Capitalism (London: Allen & Unwin, 1986).
- Derek Heater, Citizenship: The Civic Ideal in World History, Politics and Education (London Longman, 1990)
- Derek Heater, Peace through Education: the Contribution of the Council for Education in World Citizenship (London: the Falmer Press, 1984).

40) 제주대학교의 관련 연구소들이 협력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교육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평화연구소, 탐라문화연구소 등이 협력 연구를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교육과학연구소는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총괄하면서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평화연구소는 평화교육프로그램을, 탐라문화연구소는 문화정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James Lynch. Education for Citizenship in a Multicultural Society (London: Cassel, 1992).
Murray Print.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Forum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Seoul, Korea: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October 16 ~17, 2001).